



교육협력위원회,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기 바란다

이원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지난 8월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 약칭) 내에 교육협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성격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사회적 협력 기구라고 규정하고, 그 기능을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교육문제 논의, 고교-대학 간 연계 및 협력과 관련한 사항 논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사항 논의, 기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협력과 관련한 중요 사항 논의로 제시하였다. 교육협력위원회는 대학총장, 교육감, 교육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과학기술계, 학부모 대표, 정부 대표 등 총 18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다. 필자는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 지위, 기능 등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협력위원회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와 협력, 이를 통한 공교육의 활성화가 중핵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적합한 관련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18명의 위원들 중에는 초·중등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2명뿐인데, 대학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인원이다.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 협력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구성에 있어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 등 초·중등 교사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놓고 어떻게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대교협은 지금이라도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고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초·중등 교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협력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대교협 내의 기구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기구로 격상하여 이 기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교육협력위원회는 대교협 소속의 하나의 기구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볼 때,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라는 한 기관의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입학제도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대교협 스스로 밝혔듯이 이 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교육문제들을 논의하는 범사회적인 기구라는 점에서도 대교협 소속의 내부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의 기능을 재검토하든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대교협법 개정 등 법률상의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입사정관제 실시 대학 및 선발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사정관제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정보의 부족, 추천서 작성 등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수업 이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 교과 이외의 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입시학원들의 대입사정관제 대비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입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고등학교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우수

사례 발표나 관련 사이트 정보로는 고등학교의 진학지도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각 대학과 대교협은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학부모들에게 대입사정관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를 비롯한 선생님들과 학생·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을 불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입학사정관 선발 및 관리 주체가 개별 대학인 만큼 각 대학의 자체적인 전형계획 마련과 충분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정보공시제 개선 차원에서 각 대학이 대입사정관제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학생 관련 자료분석 등 역할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고, 자체 연수 강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수시 또는 정시 모집기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모집기간 이외에도 학생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입학사정관 개인이 아니라 각 대학에 있는 만큼 개별 대학이 입학전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왜곡이나 부작용을 없애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한 수능성적 공개로 인해 고교 등급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통한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고교 우대 등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대교협 및 정부는 고교 등급제를 시행하는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대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대입사정관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업체의 자기소개서 대필 등 부조리 적발시 법적 엄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게 해야 한다. 대

입사정관 제도는 일과성의 실적주의로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의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대입사정관제가 고교 등급제에 악용되거나 고등학교 현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과의 연계 장치로 선용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진로 개척에 선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은 입학사정관제의 신분 보장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들의 사교육시장 유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 등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대학, 대교협,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과 책임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최근 대입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제도가 대입전형제도의 전부는 아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대입전형제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또한, 대입제도의 우선적인 역할과 책임은 학생선발의 주체인 각 대학에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대학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입업무를 입학사정관들에게 맡기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원 학생들의 합격 여부에 대한 대답은 대학의 몫이지 입학사정관들의 몫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대입 등 운영의 자율권 확대는 동시에 더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받게 되었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영, 연계와 협력이 더 필요해졌다. 대입제도 운영에 있어서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긴밀한 연

계와 협력 체제는 필수적이며 그 운영 과정에서 고교, 대학, 대교협, 정부의 역할과 책임 관계의 정립이 요청된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에 중점을 두되 교육평가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확인되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 모집 단위별 전형 기준과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과 고등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대교협은 정부의 대위자가 아니라 각 대학에 대한 지원과 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는 대학 협의체로의 대입업무 이관이 대입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이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입제도의 원칙을 수립하고 대학과 대교협에 대한 지원과 통제 등 국가 수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영민**

필 / 자 / 소 / 개

이원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잠실고등학교 근무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위촉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회추진단 민간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논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중등위원장, EBS 책임전문위원 및 입시가이드 강사, 한국국제학교기금 명예위원장, EBS 언어·논술 강사, EBS 라디오 '교사의 시간' 진행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를 위한 세계NGO포럼 초대이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최고위과정 강사 등을 맡고 있다. 교육현장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대내외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방송 및 신문의 토론, 기고 등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관심사는 교육 및 교원정책 전반이며, 특히 대학입시, 독서 및 논술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